



의안번호

제56호

논산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제 출 자	논산시장
제출연월일	2020. 5. 8.

논산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의안 번호	제56호
----------	------

제출연월일 : 2020. 5. 8.

제 출 자 : 논 산 시 장

1. 제안이유

- 논산시 에너지 자립도시 구현을 위한 에너지 시책의 수립·시행과 신재생 에너지의 이용·보급·촉진을 통해 친환경 녹색도시로의 에너지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친환경 에너지 수급구조를 실현하여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시민의 에너지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 및 책무 등(안 제1조~제3조)
- 나. 에너지계획수립·시행 등(안 제4조~제5조)
- 다. 에너지관련 부문별 시책(안 제6조~제9조)
- 라.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 촉진 및 지원(안 제10조~제12조)
- 마. 에너지위원회 설치·운영(안 제13조~제20조)
- 바. 에너지시책 추진 지원 등(안 제21조~제2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 다.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 (2) 성별영향평가 : 자체개선안 동의
-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아님
- (4)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

가. 예고기간 : 2020.03.30. ~ 2020.04.20.(21일)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5) 비용추계서 : 붙임 참조

- (6) 충청남도 소관실과 : 충청남도 에너지과(041-635-3463)

□ 조례안

논산시 조례 제 호

논산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에 따라 논산시의 지역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책 수립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을 통하여 논산시 에너지 자립도시 구현과 더불어 시민의 에너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에너지법」 제2조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책무 등)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해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과 추진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홍보 등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시민의 이해와 협력을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에너지 계획

제4조(지역에너지 계획) ① 시장은 지속 가능하며 종합적인 에너지이용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논산시 지역에너지 계획(이하 “에너지 계획”이라 한다)을 5년 이상의 계획기간으로 하여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에너지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수급 추이와 전망 및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대책
2. 에너지 절약 방안 수립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시설 확대
3.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보급 확대와 에너지 자립 확대 방안

4. 미활용 에너지원의 개발·사용을 위한 대책
 5. 에너지 이용에 따른 이산화탄소의 배출 감소를 위한 대책
 6. 에너지 빈곤층 지원에 관한 사항
 7. 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인재양성,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에너지 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시장은 에너지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나 연구를 전문 연구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계획 수립 시 시민 및 관련기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제4조의 에너지 계획을 토대로 매년 지속가능한 에너지 자립도시(에너지를 스스로 생산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외부의 에너지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도시를 말한다) 구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장 에너지 관련 부문별 시책

제6조(공공부문) ① 시장은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소비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을 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공공기관별 에너지 절감목표의 설정·관리
 2. 에너지 절약제품 및 고효율 에너지 기기 인증제품의 사용
 3.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의 확대 계획 및 시범설치, 유지관리
 4. 관용차량 구입 시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우선구입
 5. 출·퇴근 통근버스 및 대중교통 이용 방안 강구
 6. 계절별 적정 실내온도 준수
- ② 시장은 에너지 관련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토목공사를 계획·시행함에 있어 에너지 절약 제품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대규모 단지 및 생태공원 개발 등의 부대시설을 건설할 경우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교육·홍보 시설을 조성·관리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건축물에 전력 및 에너지 공급률 향상을 위한 분산형 에너지 (석유나 원자력을 이용한 발전 방식 대신, 태양광이나 바이오원료 등을 이용하는 소용량 발전 에너지를 말한다)설비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제7조(산업부문) 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위하여 사업자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이용 등 미활용 에너지의 자원화 및 산업체의 신·재생 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한다.

제8조(건물부문) ① 시장은 건축물 허가단계에서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며, 건축물 개·보수 시 건축주에게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에너지 효율이 높거나 에너지 절약효과가 우수한 에너지 사용 기자재를 말한다)로 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계획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허가단계에서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9조(수송부문) ① 시장은 자동차의 연료 절감과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한 도로교통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천연가스차량,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 청정에너지차량 및 충전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중교통의 확충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누구나 저렴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및 이용시설의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 촉진 및 지원

제10조(보급지원) ① 시장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이하 “신·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를 설치하는 기관·단체·개인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설치의무기관의 대상건축물은 제외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하여 논산시의회 동의를 구하려고 할 때에는 동의안을 논산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기간 내 설치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착공일로부터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3.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설치공사를 계속할 수 없어 대상자가 지원결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을 받은 자가 해당 시설물을 임의로 철거 멸실하는 등의 행위로 당초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조금을 받은 자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조금을 받은 자가 제2항의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등) ① 시장은 보조금을 받은 자에게 보급사업이 완료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에너지 생산량 및 유지보수현황 등을 기입하는 등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급사업으로 보급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 등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제5장 에너지위원회 설치·운영

제13조(설치) 시장은 에너지 정책 및 관련 계획 등을 자문·심의·평가·

조정하기 위하여 논산시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행복도시국장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논산시의회가 추천하는 논산시의회 의원

나. 에너지 및 환경 분야 시민단체의 관련전문가

다. 에너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에너지자원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평가 등을 한다.

1. 에너지 계획 및 비상시 지역에너지 수급계획

2. 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본 시책, 실천과제의 개발 및 평가

3. 에너지 시책사업의 사업계획서, 제안서 등에 대한 평가 및 자문

4. 에너지에 관련된 지역의 민·관 협력 및 갈등 조정

5. 에너지 이용 및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예산의 효율적 사용

6. 공공·민간부문 에너지 이용합리화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홍보를 포함하여 에너지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

제17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 ③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전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회의 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⑦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이 관계공무원 및 에너지 분야의 민간 전문가의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제14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 1. 해당 업체의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
-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
- 3. 그 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
- ②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 위원 중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제14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 3. 직무와 관련하여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때
- 4. 위원이 제18조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사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위원 본인이 해촉을 위원장에게 신청한 때

제20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논산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에너지시책 추진 지원 등

제21조(행정 및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에너지 관련 시책 수립 및 사업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
2.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이용·보급
3. 에너지전문기업 및 사업자 육성, 기술 사업화 촉진
4. 에너지빈곤층 및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5. 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에너지절약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에너지 관련 사업

② 시장은 논산시에서 주최하는 에너지에 관한 학술회·토론회 등에 참석 또는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숙식, 교통비 등 필요경비와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22조(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① 시장은 에너지 자립률 제고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에너지를 스스로 생산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외부의 에너지 도움 없이 자체적 에너지를 자급자족 하는 마을(이하 “에너지 자립마을”이라 한다)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23조(포상) ① 시장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및 신·재생에너지 시책과 관련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사업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에 관한 절차는 「논산시포상조례」에 따른다.

제24조 (백서 발간 등) ① 시장은 에너지 시책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 등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에너지백서를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

1. 에너지수급 동향과 전망
2.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 추진 현황
3.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현황
4. 에너지시책 관련 예산 집행 현황
5. 에너지빈곤층 지원 등 추진 현황
6. 에너지 통계

② 시장은 에너지 계획과 제1항에 따른 에너지 백서 작성에 관한 조사 또는 연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성 명
입 안 자	사 회 적 경 제 과 장	김 민 영
	에 너 지 자 원 팀 장	박 홍 식
	담 당 자	신 의 호 (7 4 6 - 6 0 2 4)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제20조(수당 등)

2. 비용추계결과**가. 추계의 전제**

- 논산시 에너지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을 대상으로 에너지 시책사업 (보조(공모)사업, 자체사업 등) 추진 관련 사업계획 심의 및 공모사업 제안서 평가 등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평가수당 포함)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하기 위함.

나. 추계결과

- 참석수당 : 100,000원 × 7명 × 1회 = 700천원
- 평가수당 : 300,000원 × 7명 × 1회 = 2,100천원

3. 작성자

사회적경제과장 김 민 영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 입							
시 비							
세 출		2,800	2,800	2,800	2,800	2,800	14,000
○ 회의참석 수당		700	700	700	700	700	3,500
○ 제안서 등 평가 수당		2,100	2,100	2,100	2,100	2,100	10,500
재원 조달		2,800	2,800	2,800	2,800	2,800	14,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2,800	2,800	2,800	2,800	2,800	14,000
	지방세	2,800	2,800	2,800	2,800	2,800	14,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참고 1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에너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란 연료·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연료”란 석유·가스·석탄,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熱源)을 말한다. 다만,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4. “에너지사용시설”이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사업장 등의 시설이나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에너지사용자”란 에너지사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6. “에너지공급설비”란 에너지를 생산·전환·수송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를 말한다.
7. “에너지공급자”란 에너지를 생산·수입·전환·수송·저장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7의2. “에너지이용권”이란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의 사람이 에너지공급자에게 제시하여 냉방 및 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8. “에너지사용기자재”란 열사용기자재나 그 밖에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9. “열사용기자재”란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기기, 축열식 전기기기와 단열성(斷熱性) 자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온실가스”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 국가의 에너지정책 및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에너지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에너지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에너지공급자와 에너지사용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의 생산·전환·수송·저장·이용 등의 안정성, 효율성 및 환경친화성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를 합리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기여하여야 한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소에너지

나. 연료전지

다.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라.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2. “재생에너지”란 햇빛·물·지열(地熱)·강수(降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나. 풍력

다. 수력

라. 해양에너지

마. 지열에너지

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 폐기물에너지(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아.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이하 “신·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생산 또는 이용하거나 신·재생에너지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설비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신·재생에너지 발전“이란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5.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26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隨意契約)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국유재산은 종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고,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0년 이

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차하거나 취득한 자가 임대일 또는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에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환매할 수 있다.
- ⑤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수선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3.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 ②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 등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에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검토 및 보완을 거치도록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사전확인이 이루어진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 중에서 운영기관을 지정하고 운영 관련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 ⑤ 제2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검토절차, 제4항에 따른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절차와 업무범위 및 그 밖에 검토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⑥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검토 및 보완을 하는 경우 건축주로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절차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다. 구호사업 또는 자선사업을 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당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를 나타내어 행하는 구호행위·자선행위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 제2항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을 통하여 충청남도의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책을 수립하고 도민의 에너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수급 전환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촉진하여 도의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에너지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할 때 산업체·도민·시민단체·학계·연구기관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란 최소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비용으로 도민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적정하게 제공하는 체계를 말한다.
2. “미활용에너지”란 폐기물 소각열, 하수처리장·매립장의 메탄가스, 건물·공장·하수처리장의 배기(수)열 등으로 활용되지 않는 에너지를 말한다.
3. “사업자”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사업장 등의 시설이나 에너지를 생산·수입·전환·수송·저장·공급 또는 판매하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분산형에너지”란 최종 수요처 부근 등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로 집단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열병합, 자가발전 등을 포함하는 에너지시설을 말한다.
5. “에너지빈곤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광열비(전기료, 연료, 난방비)를 기준으로 에너지 구입비용이 가구 소득의 10퍼센트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

제4조(책무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과 추진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 구축
2. 에너지절약 및 효율적 이용 등 수요관리
3. 신·재생에너지, 미활용에너지의 개발 및 이용·보급 확대
4. 온실가스 배출의 저감
5. 분산형에너지 보급
6.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보편적 에너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

7. 에너지 관련 공익 활동 촉진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강화
- ② 시장·군수는 에너지 관련 자체계획 수립 할 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의 에너지계획 및 시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사업자는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도 및 시·군의 에너지계획 및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④ 도민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을 우선 구매·사용하도록 노력하며,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각종 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에너지계획 수립 등

제5조(에너지계획) ① 도지사는 에너지절약과 효율적 이용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촉진을 위하여 「에너지법」 제7조에 따라 충청남도에너지계획(이하 “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에너지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에너지 수급의 추이·전망 및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대책
 2. 에너지절약 및 효율 향상 등 수요관리
 3.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 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
 4. 충남도 내 에너지설비의 설치·운영·관리·폐쇄
 5. 시·군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및 실천에 관한 평가 및 지원
 6. 에너지빈곤층 등 지원
 7. 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인력양성, 교육·홍보 및 국내외 교류·협력
 8. 에너지 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갈등 조정
 9. 에너지계획 추진체계 구축 및 거버넌스 활성화
 10.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그 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
 11. 미활용 에너지원의 개발·사용을 위한 대책
 12.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도지사는 에너지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나 연구를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계획 수립 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6조(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① 도지사는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조에 따라 매년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절약형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공공 및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및 효율

- 향상 등 수요관리에 관한 사항
- 2.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
- 3.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관한 사항
- 4.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 에너지 수요관리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제7조(공공부문) ① 도지사는 민간부문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신·재생에너지보급 노력을 선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 구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공공기관별 온실가스 및 에너지절감 목표의 설정·관리
 2.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사용
 3. 에너지절약형 사무용 기기 구입
 4. 에너지시설 사용·관리의 진단 실시
 5.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의 설치
 6.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의한 에너지절약 사업
 7. 업무용 관용차량의 경차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
 8. 출·퇴근 시 통근버스 및 대중교통 이용방안 마련
- ② 도지사는 에너지 관련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토목공사를 계획·시행할 때 에너지 절약 제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도지사는 대규모 단지 및 생태공원 개발 등의 부대관리시설 건설 시 친환경에너지에 관한 교육시설을 조성·관리할 수 있다.
- ④ 도지사는 건축물에 전력 및 에너지 자급률 향상을 위한 분산형 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제8조(건물부문) ① 도지사는 도시계획위원회 및 지방건축위원회에 에너지분야 관계자를 1명 이상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건축물에 단열재, 고효율의 냉방·난방 장치 및 조명기구, 일사조절장치 등 에너지 절감 설비, 소규모 지역냉난방시설, 신·재생에너지, 전력자급률 향상을 위한 분산형전원 설비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하며, 필요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수송부문) ① 도지사는 자동차의 연료 절감과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한 도로교통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천연가스차량, 바이오 디젤,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 청정에너지차량 및 충전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도지사는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지능형교통시스템(ITS) 개발 및 도입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④ 도지사는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및 이용시설의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연료절감, 교통량 감축에 도움이 되는 승용차 함께 타기, 대중교통 이용, 무동력교통수단 이용, 자동차부제 등을 적극 권장하며, 필요한 경우 기관·단체에 기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산업부문) ① 도지사는 에너지 진단을 실시하거나 에너지절약형 시설, 신·재생 에너지 설비, 사업장 내 미활용에너지의 자원화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에너지절약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 따라 고효율 에너지기자재를 생산하는 사업자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라 등록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제11조(시범지구 조성) 도지사는 에너지 수요관리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 육성을 위해 시범지구를 조성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충청남도에너지위원회

제12조(에너지위원회) 도지사는 에너지시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 등을 자문·심의·조정 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1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위촉직 : 충청남도의회 의원, 시민단체,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학계·협회·기업 등의 관계자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당연직 : 도 소속 공무원

⑤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에너지 관련 업무를 총괄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4조(실무위원회 구성 운영)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 분야, 에너지전환 분야, 에너지신산업 육성 분야, 신·재생에너지 분야, 수소산업 분야

등 분야별 실무위원회를 두고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실무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1. 에너지 관련 기본 시책의 개발 및 평가
2. 에너지계획의 심의
3. 에너지행정의 민·관 협력 방안 마련
4. 에너지이용과 관련된 타 조례의 제·개정에 대한 협의
5. 에너지사용시설 및 이용자에 대한 에너지사용 제한의 심의
6. 그 밖에 교육·홍보 등을 포함하여 에너지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의 심의

제16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제14조제1항에 따른 각 분야별 실무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하거나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서면 심의·의결할 경우 다음 회의 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11명 이상 21명 이하의 위원을 지정한다)을 확정하고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제13조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업체의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
3. 그 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

②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 위원 중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제13조제4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3. 직무와 관련하여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때
4. 위원이 제17조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사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위원 본인이 해촉을 위원장에게 신청한 때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위원회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에너지시책 추진 지원 등

제20조(행정 및 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에너지 관련 시책 수립 및 사업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
2.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이용·보급
3. 시·군의 에너지시책 수립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4. 에너지전문기업 및 사업자 육성, 기술 사업화 촉진
5. 에너지빈곤층 및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6. 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에너지절약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7. 에너지 관련 국내·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사업 추진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에너지 관련 사업

② 도지사는 도민·사업자, 에너지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이용·보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및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등을 위해 재정 등을 지원한 경우 그 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온실가스 배출권 등을 지분에 따라 확보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도에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시범 및 실증 사업에 참여하는 발전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발전원가와 전력거래 가격의 차액인 발전차액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1조(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등) ① 도지사는 시·군의 에너지 자립률 제고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에너지자립 마을 및 에너지자립 섬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에너지자립 마을 및 에너지자립 섬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2조(교육·홍보 등) ① 도지사는 도내 에너지계획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의 시책을 널리 홍보하고 에너지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 등

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신·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술회나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술회·토론회 등에 등록을 하고 참여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를 제공할 수 있다.

제23조(에너지센터 설립 등) ① 도지사는 에너지 이용합리화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남에너지센터(이하 “에너지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에너지센터가 수행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2. 지방자치단체, 도민, 기업에 대한 에너지사업 컨설팅
3. 신·재생에너지 펀드 구성·운영
4. 충청남도가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지원
 - 가. 에너지 수요관리, 신·재생에너지 생산, 제로 에너지빌딩, 친환경 자동차, 수소 산업 등 에너지 신산업분야의 사업화
 - 나. 충남형 에너지전환 사업모델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 다. 주민참여형 에너지사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및 소득창출 연계 사업
5. 친환경 에너지 전환 및 에너지 신산업, 에너지 이용합리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 등에 관한 사무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
6. 에너지 분야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공감을 위한 전방위적 홍보활동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무

③ 에너지센터의 조직, 인력, 예산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장 보칙

제24조(포상) ① 도지사는 매년 에너지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의 시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자 또는 기관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른 에너지절약 추진실적 평가결과 우수한 기관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으며,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포상에 관한 절차는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25조 (백서 발간 등) ① 도지사는 에너지 시책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 등을 도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에너지백서를 매년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

1. 에너지수급 동향과 전망
2.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 추진 현황
3.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현황

4. 에너지시책 관련 예산 집행 현황

5. 에너지빈곤층 지원 등 추진 현황

6. 도 에너지 통계

② 도지사는 에너지 계획과 제1항에 따른 에너지 백서 작성에 관한 조사 또는 연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참고 3**충청남도 및 도내 타시군 조례 제정 현황**

(단위 : 년도)

	논산	충남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계룡
에너지 기본 조례		○(06)	○(08)	○(17)			○(09)	○(13)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에너지 기본 조례	○(19)							○(09)

☐ **타 지자체 에너지 기본 조례 주요 사항**

- 충남 : 2006년 조례 제정, 현재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중
- 천안 : 에너지절약 마일리지제도 도입(재래시장상품권으로 교환)
- 당진 : 에너지자립마을 수립,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사후관리 실시
- 태안 : 신축건물 총공사비의 100분의 5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사용하여야함